

# 제5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고 성 준 \*

## I. 소련과 동구제국과의 관계

소련과 동구제국은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서로간에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상호 협력하므로서 역내의 사회주의 세력의 결속과 대 서방관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처라는 전형적인 동맹의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그들 간의 관계는 외형적인 모습처럼 단순한 것만은 아니며 거기에는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즉 동질성을 바탕으로 일치된 목적을 향해 순탄하게 지속되고 있는 관계라기 보다는 이질적인 토대 위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현실적 상황에 따라서 수단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을 적지않게 안고 있는 관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관계는 쌍방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달성의 방법들에 게서 나타나는 조화와 상충이 그것의 유지 또는 변화에 크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갈 것이다.

### 1. 관계의 성립과 유지

소련과 동구제국의 오늘날과 같은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동구제국이 소련의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 위성국화됨으로써 일방적으로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 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부교수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그 통제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그들간의 관계는 때로는 공산주의 이념마저 초월하는 철저한 각자 이익추구의 바탕에서 성립되고 유지되는 관계이다. 각자의 이익추구는 경우에 따라 서로간의 지배, 협력, 통합, 자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조화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함으로서 역사적으로 보아 온 것과 같은 그들 관계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국이익중심주의의 근간에는 지정학적 요인 외에도 그들간의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자의 요인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더 부추겨 자국이익중심주의를 심화시키게 하고 있다.

소련의 동구제국에 대한 자국이익중심주의적 정책은 이념적인 면에서나 국제정치적인 면에서나 모두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정책은 철저히 자국이익중심적임에 틀림없다. 소련은 그들 자신의 안보와 세계공산주의 세력에 있어서 중주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구에 친소적인 공산정권을 세우고 그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지원을 했으며 그 후에는 동구제국들이 그들의 이익에 배치된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지비하게 군사적인 개입을 했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인 협력마저도 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즉 소련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동구제국을 영속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sup>1)</sup> (1) 소련의 안전보장을 위한 완충지대의 확보와 NATO군과 대치하기 위한 전진기지 획득, (2) 독일의 동서분할을 군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회랑확보, (3) 소련의 대외전략 추진에 있어 동구제국의 이용, (4) 소련의 경제·군사적 추가 공급원의 확보 등이다.

한편 동구제국의 입장을 보면 그들 정권의 정통성에 있어서의 약점,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비중,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 등을 극복하는데 소련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에서 적절한 협력과 타협으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소련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차 그들은 자율적인 정치·사회적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경제적으로 소련식의 한계

1) 金學俊·全寅永, 「蘇聯 및 東歐共產主義體制研究」 1984, 서울대출판부, p.176.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를 벗어난 독자적인 계획과 운영으로 개선된 경제생활을 영위코자하는 욕구도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얻고자 하는 동구제국의 이익에 대하여 폴·마러(Paul Marer)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sup>2)</sup> (1)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점, (2) 서방세계의 경제상황 변화에서 오는 불리한 점의 극복, (3) 블럭경제의 이점 활용 등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동구제국으로 하여금 소련에 대해 군사·외교적 협력과 정치적 자율성 요구의 자속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소련과 동구제국의 관계는 소련이 추구하는 정치·군사적 이익과 동구제국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 간의 조화를 통해 유지되어 있으며 만일 이것들이 서로 상충된다면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 2. 관계유지의 두 축

소련과 동구제국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두 축은 군사·정치조직인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경제협력체인 코메콘(Comecon)이다. 물론 군사·정치적으로 소련은 동구의 각국과 쌍무적인 협정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있고,<sup>3)</sup> 코메콘은 그 회원국 구성상 반드시 그 영향이 동구에 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기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1) 바르샤바조약기구(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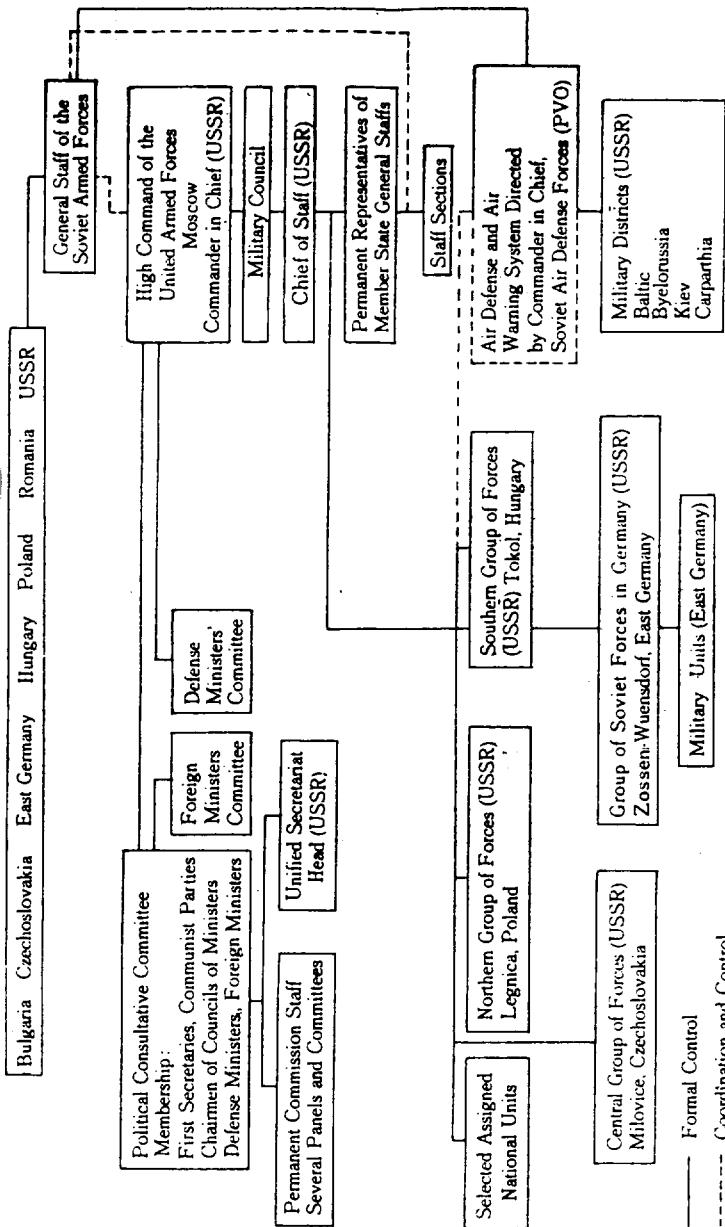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서방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대항하여 1955년 5월 14일 소련에 의해 유고를 제외한 동구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초창기(1955~60)에는 그 힘이 허약했고 별로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따라 소련과 동구제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군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구내에 고위 정

2) Paul Marer, "Prospects for integration in Eastern Europe: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in Jan F. Triska and Paul M. Cocks (ed.), *Political Development in Eastern Europe* (N.Y.: Praeger Publishers, 1977), pp. 262-65.

3) 리차드 F·스타아, 金永來·韓錫泰역, 「동유럽 공산정치론」, 민음社, 1985. p. 329.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방

〈표 1〉 바르샤바 條約機構 組織



Sources: Based on Lawrence T. Caldwell. "The Warsaw Pact: Directions of Change." *Problems of Communism* (September-October 1975), p.8; CIA, *Directory of USSR Ministry of Defense and Armed Forces Officials* (Washington, D.C., September 1976), pp.27-31; [German Democratic Republic], *Session of the Political Consultative Committee of the Warsaw Treaty States held in Bucharest, 25-26 November 1976* (East Berlin, 1976), pp.28.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치회담을 설치하는 등으로 정치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련은 이 기구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서 정치·군사·외교적인 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 동구는 소련에게 있어서 안보상으로 서방세계에 대해 방과제 구실을 하는 완충지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소련으로 하여금 동구제국을 지배하여 소기의 이익을 거두게 하고 있다. 또한 동구제국의 지배에 있어서 필요한 명분과 방편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구내의 자국군 주둔과 회원국의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고, 회원국에 대한 압력과 설득(회유)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소련은 이 기구를 통해 동구의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서 대서방정책에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제3세계와의 관계유지에 동구제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심지어는 동독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수행의 대리인으로 삼는 등의 이점을 추구하고 있다.<sup>4)</sup> 이와같이 이 기구를 통해 소련이 얻는 이익은 지대하므로 소련은 자국의 통제 밑에서 이 기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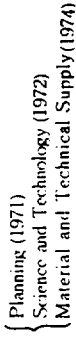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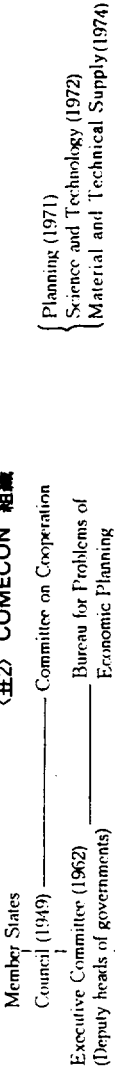
한편 동구제국이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한 입장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소련의 무력에 대한 일방적 압력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이 기구를 통해 보다 개선된 양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소련의 압력을 약화시켜 나가며 이 기구의 개혁을 통해 그들의 자주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데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지도자나 정권이 이 기구를 통해 소련과 협력하는 댓가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기까지 하다. 또한 이 분야의 협력을 경제적 이익의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를 바라는 동구인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서 점차 커져 가고 있는 그들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적 자주성 확보의 요구에 상충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2) 코메콘(공산국 상호경제위원회 : Comecon)

코메콘은 서방의 마샬플랜에 의거한 유럽경제협력기구에 대응하여 소련이

4) 金學俊·全寅永, op. cit., p.175.

〈丑〉 COMECON 組織



Permanent Commissions  
 (28) in order of formation

Specialized organizations (7)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Moscow), 1971	Economic Problems Institute (Moscow), 1971	Administration for Electric Power System (Prague), 1964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Moscow), 1962	Freight Bureau (Moscow)	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Moscow), 1964	Railroad Car Pool (Prague), 1964
1. Agriculture (Sofia), 1956	2. Forestry (Bucharest)	3. Foreign Trade (Moscow), 1956	4. Coal Industry (Warsaw), 1956	5. Mechanical Engineering (Prague), 1956	6.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y (Bucharest), 1956	7. Ferrous Metallurgy (Moscow), 1956
8. Nonferrous Metallurgy (Budapest), 1956	9. Chemical Industry (East Berlin), 1956	10. Timber, Cellulose, and Paper Industry (Budapest)	11. Transportation (Warsaw), 1958	12. Building Industry (East Berlin), 1968	13. Electrical Energy (Moscow), 1958	14.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Moscow), 1960
15. Economic Problems (Moscow)	16. Standardization (East Berlin), 1962	17.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Moscow), 1962	18. Statistics (Moscow), 1962	19. Machine Construction (Moscow), 1962	20. Monetary-Financial Problems (Moscow), 1962	21. Food Industry (Sofia), 1963
22. Light Industry (Prague), 1963	23. Radio, Engineering, and Electronics (Budapest), 1963	24. Geology (Ulan Bator), 1963	25. Telecommunications and Post (Moscow), 1971	26. Environmental Protection (East Berlin), 1973	27. Health Affairs (Moscow), 1975	28. Civil Aviation (Moscow), 1975

Sources: N.V. Fadeev, SEV, 1949--1974 (Moscow, 1974), p.67; REI report (by Harry Trend), "Comecon's Organizational Structure," Part 1, 3 July 1975; *Ibid.*, "An Assessment of the Comecon 30th Session," 23 August 1976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표3〉 全體貿易量에 對한 對蘇貿易의 比重\*

	Bulgaria	Czech	GDR	Hungary	Poland	Romania
1948		16.2	20.2	19.0	22.0	—
1949	—		37.7	23.2	19.1	
1950	52.2	27.5	39.7	26.8	26.6	
1951			45.6	29.1	25.0	
1952	57.1	34.9	42.3	29.7	32.5	
1953	49.7	35.5	45.7	33.4	33.5	
1954	46.3	35.0	44.1	30.3	37.6	
1955	48.9	34.5	38.2	21.8	32.1	
1956	45.3	31.8	40.9	23.6	30.6	
1957	53.5	34.0	44.6	29.3	30.6	
1958	53.2	33.0	42.8	26.9	26.2	51.5
1959	52.2	35.6	44.9	29.7	29.8	47.3
1960	53.1	34.4	42.8	30.2	30.3	40.1
1961	52.1	33.6	43.7	33.5	30.6	40.4
1962	53.3	37.8	48.9	36.0	32.5	40.6
1963	54.0	39.0	48.6	34.3	33.7	41.9
1964	53.0	37.5	46.6	34.7	32.7	42.2
1965	51.1	36.9	42.8	35.6	33.1	38.8
1966	49.2	33.5	41.4	33.1	32.2	33.5
1967	51.3	35.0	41.9	34.7	35.2	28.2
1968	54.2	33.6	42.6	37.1	35.9	28.7
1969	55.2	33.7	41.2	35.9	36.7	27.3
1970	53.0	32.5	39.1	34.0	36.5	27.0
1971	53.6	32.7	38.2	34.5	35.5	25.0
1972	54.3	33.6	37.7	35.4	33.2	24.5
1973	53.3	30.8				

\* The entries are for combined imports and exports. Data for 1956~1966 was obtained from Kintner and Klaiber (1971). Entries for 1967~1973 are based upon data in the United Nations annual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1949년 1월 동구 6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창립하였다. 그후 회원국에는 다소 변동이 생겨 지금은 동구지역외의 회원국까지 포함하여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에 의해 동구제국의 경제는 전후 10여년 동안 철저히 소련에 예속되어 있었다. 그후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련과 동구의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각국의 경제적 잠재능력의 차이, 경제발전단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

소련은 이 기구를 통하여 동구경제의 대소의존도를 심화시킴으로서 동구제국을 확고히 지배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은 소련이 얻는 막대한 정치·외교적 이익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것이다.

동구제국은 2차대전 이후 초기의 경제건설단계에 소련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고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시장 가격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고, 역내 교역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는 등 소련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다. 동구제국이 얻는 이러한 이익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경제를 소련에 의존하게 하고, 정치·외교적 독자성을 요구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는 등 불리한 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는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중요한 이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달라지고 있는 경제상황은 동구제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련의 방식과는 다른 자율적인 경제개혁을 추구하게 함으로서 이러한 상호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추구에 상충적인 면을 가증시키고 있다.

### (3) 개입과 자율의 상관관계

소련과 동구제국의 관계는 2차대전 이후 동구제국이 소련에 의해 위성국화 된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시적인 변화는 소련의 이익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었고 그 이상의 진전은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관계가 상호이익의 조화를 이룬 가운데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고 변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이들 관계의 현실과 장래를 진단하기 위하여 우선 몇가지 사태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은 소련군과 친소공산주의자들을 앞세워 유고와 알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바니아를 제외한 전 동구제국에 친소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이 지역을 그들의 위성국화 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지도자였던 티토를 굴복시키지 못함으로써 유고는 독자 공산주의정권을 유지하게 되어 이른바 동구에서의 다중심주의(polycentrism)가 시작되었다.<sup>5)</sup> 그후 스탈린이 죽고 흐르시쇼프에 의해 스탈린적 하운동이 나타남으로서 소련의 일방적 지배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그후 스탈린이 죽고 흐르시쇼프에 의해 스탈린적하운동이 나타남으로서 소련의 일방적 지배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 때의 큰 사건은 두가지 인데 한가지는 폴란드사태이고 또 한가지는 헝가리사태이다. 폴란드사태는 폴란드가 소련의 패권을 인정하여 굴복함으로써 소련의 직접개입이 없는 가운데 제한된 범위내에서 국내 정치적인 개혁이라는 변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헝가리사태는 소련에 대한 정면도전의 양상을 드러내므로서 소련의 직접개입을 불러일으켜 정치적으로는 전혀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나 그를 계기로 경제적인 면에서 약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두가지 사태는 소련과 동구제국의 관계에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며 아울러 변화의 한계를 예시해 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후 동구제국에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변화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자유화경향이 점차 빠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1968년 1월에 체코의 최고지도자가 된 두브체크는 비공산주의적인 과감한 민주화 조치를 시도함으로써 소련의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의 결과 소련은 동구제국이 그들의 이익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브레즈네프독트린이었다. 브레즈네프독트린은 공산권의 한 국가가 거기에서 이탈하려 할 때 그것을 전 사회주의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군사개입등의 강경조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공산당들은 소련공산당에 반대하여 유로코뮤니즘의 기치를 높이들게 되었다.<sup>6)</sup> 소련과 동구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사태는 폴란드사태이다.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운동이 소련의 반대로 자국의 군대에 의해 말살되고 군정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폴란드의 상황은 대단히 복잡하고 만일 소련이 폴란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면 엄청난 댓가를 치뤄야

5) 安秉俊, 「比較共產主義와 現代國際秩序」, 나남출판사, 1986, p. 79.

6) Ibid. p. 80.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나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그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 사태는 동구에서 변화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민족주의 감정과 관련이 있고, 경제적인 태서부터 생겨난다는 것과 그러한 사태의 결과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잘 보여 주었다.

### (4) 「고르바췌프」의 개혁과 동구관계

소련은 「고르바췌프」정권이 출현한 지난 85년 부터 소련체제가 안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거대한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再編)> <글라스노스트(公開性)> <우스카레니에(加速化)> 등의 구호가 범람하는 속에 이루어지는 소련의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물결은 「고르바췌프」의 등장과 때를 같이하여 시작되고 있는 과도기적 변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또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개혁의 파도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 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련에서 일고 있는 개혁의 흐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고르바췌프」의 개혁의지가 형식적이거나 명분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점이다.

소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개혁은 크게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개혁으로 대별된다. 체제개혁의 가장 중심인 경제개혁은 갖가지 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며 또한 경제운영구조에 있어서 강한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을 링크시키려는 의도로 집약할 수 있다. 경제개혁의 내용은 먼저 농업 부문에서 농민들에게 자극을 주어 생산을 높이기 위해 집단농장식 경영에서 벗어난 개인 내지 가족 청부제생산(請負制生産)을 허용하고 있다. 공업에서는 기업의 자주적 관리권, 임금<평균주의>의 폐지, 보상금제의 도입, 독립채산제, 개인기업허용, 시장메카니즘의 원용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서방제국의 자본과 기술, 현대적 경영방식을 받아들이는 대외 개방정책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침체·낙후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러한 개혁을 놓고 소련경제가 자본주의화 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부정적이다. 여전히 경제의 최고관리가 모두 국가소유, 국영으로 되어 있고 소련공산당의 지도(獨裁)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있어 소련경제가 자본주의에 삼켜버려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sup>7)</sup>

「고르바췌프」는 정치개혁 없이 경제개혁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정치체제의 개혁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는 고조화된 사회주의이데올로기가 혁명을 위한 선동구호로는 매력적일지 모르나 실제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는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데올로기의 구조개편과 개념적인 구성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시도가 기본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다. 그는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단행했고, 당·정 및 사법기구의 선거에 복수후보제와 비밀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 자유민권, 복수정당제, 사회의 다원주의 등 서구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요컨대 일당독재를 핵심으로 공산주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력있게 그리고 구미선진국가를 따라 잡을 정도로 부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sup>8)</sup> 그럼에도 이러한 계획은 기득 이익을 놓칠 줄 모른다는 보수파의 견제를 받고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르바췌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동구위성국에 대한 소련의 정책이나 영향력의 행사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한때 교조적인 동일자의 집행자로만 보였던 소련은 동구 위성국들에 보다 큰 실험의 자유를 주고 있다. 소련은 주저하는 동구지도자들을 부드럽게 자극, 「고르바췌프」가 바라는 경제적 정치적 변화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끌고 있다.<sup>9)</sup> 이러한 변화는 「고르바췌프」가 국내에서 자신의 개혁정책을 재강화시켜주기를 바라는 변화들이다. 「고르바췌프」는 86년 2월 제27차 당대회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에게 「각국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신중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고르바췌프」집권이래 동구에서 변화의 기운이 일고있는 가운데 폴란드에서는 정치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계획을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부결되고 말았다. 또 헝가리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결과로 소련에서 채택된 것보다 훨씬 경쟁적인 방식의 정치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르바췌프」는 87년 5월 소련에

7) 梁好民, “중·소에 있어서의 체제 개혁의 제 문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87.4.24) 「사회주의 체제의 이상과 현실」, 세미나 발표논문, p. 17.

8) Ibid.

9) 「東亞日報」 1988. 1. 5.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서와 같은 변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엄격한 중앙통제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초체스쿠」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냉소적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동구위성국인 6개 나라에서 공산당지배 자체에 위협이 가해질 정도의 심한 변화까지 「고르바췌프」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 「고르바췌프」는 선뜻 내키지 않고 또 그의 국내 국제적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잘알면서도 군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결국 「고르바췌프」는 동구국가들 내에서 사회주의의 이익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변화는 막고, 그 자신의 경제개혁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구국가들의 부진한 경제가 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 II. 경제체제의 개혁

### 1. 침체된 경제

87년 말에 외신이 전한 동구국가들의 시위-파업 양상은 동구권에 경제진동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루마니아의 경우, 시위가 예전에 볼 수 없이 과격 경관등 3명이 사망하고 시청이 불타는가 하면 「초체스쿠」대통령의 초상들이 갈기갈기 찢기는 등 공산국가의 시위라가 보기 어려운 양상을 보였다.<sup>10)</sup>

루마니아의 제2도시 브라스프에서 발생한 이 시위에서 노동자 2만여명은 상점을 약탈하고 길거리의 차량에 불을 질렀고 「초체스쿠를 죽여라」는 구호까지 외쳤다. 「초체스쿠」정권은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정되 있던 공산당 대회를 연기하기 까지 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화인(火因)은 브라스프의 한 공장 간부선거에서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지탄을 받고 있던 공산당원들만이 입후보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루마니아가 취해왔던 혹독한 긴축정책이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백억달러의 외채를 5년안에 모두 상환한다는 목표 아래 「초체스쿠」정권은

10) 「朝鮮日報」 1987. 11. 26.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지난 84년 이래 강력한 긴축정책을 써 왔다. 가로등을 끄고 TV방영을 1일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쥐어짜기 정책은 금년 상반기중에만 15억달러의 외채를 절감하는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임금이 동결된 노동자들의 생활을 압박했다. 특히 루마니아 정부는 임금 50%를 삭감 이들의 불만에 불을 질렀다.<sup>11)</sup>

한편 그 즈음 유고슬라비아도 파업 몸살로 시달렸다. 파업은 일주일이상 계속되고 확대되었다. 당시 외신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파업중인 마케도니아시 목재공장 노동자 1천5백명은 「한달 평균 47달러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리느냐」며 바로 거리로 뛰어나갈 태세라고 보도하였다. 또 외신에 의하면 유고의 일부 지역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벌이다 실제로 거리로 나선 경우도 있었지만 루마니아처럼 과격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같은 파업은 유고 정부가 인플레이 억제책으로 임금동결-일부품목가격의 30~70%인상이라는 이중적 조치를 발표한데서 기인했다.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은 인상된데 반해 임금은 동결을 시키니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sup>12)</sup>

폴란드의 경우도 본격적인 시위나 파업은 없지만 식료품을 구하지 못한 일부 노동자가 상품을 털었다는 소식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동구권의 「경제폭동」 몸살의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육점에 가도 살 고기가 없다. 우유, 식용유, 버터, 쌀, 밀가루 등 당장 먹어야 할 필수품을 사려해도 가게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되는 형편이다. 루마니아의 브로소프시의 성년 노동자들이 몇몇 가게를 습격했지만 텅빈 선반위에 가져갈 물건조차 별로 없었다고 토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sup>13)</sup> 루마니아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전기를 끊는다. 아무리 추워도 난방온도를 섭시 12도이상 올리면 위법이다. 게다가 인플레이는 계속되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되어 이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동유럽국가들이 심각한 경제침체에 봉착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개혁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11) 「한국일보」, 1987. 11. 24.

12) Ibid.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 2. 개혁경제<sup>14)</sup>

동구공산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구조상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소련제도를 모형으로 한 중앙집권 계획통제정책을 추구하고 왔다. 이러한 정책이 50년대까지는 제한된 자원을 묶어 특정 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그 후 정치적 사회적 변천에 따른 경제목표와 요청증대로 이 체제는 비능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산업분야의 다변화와 생산과정의 복잡화는 전문적이고 정밀한 운영을 필요로 하여 중앙으로부터의 일괄 통제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중공업 편중정책은 경공업과 농업을 자연 경시하게 만들었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최저수준으로 떨어뜨렸다.<sup>15)</sup> 또한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동구제국들은 국민의 개인소비품 생산 요청을 고려하려 했으나 중앙계획에 습관된 체제가 소비자 요청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흠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체제에 충실했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점차 이와 같은 중앙통제 경제체제의 구조적 개혁에서부터 경직된 경제체제에 활기를 주는 제도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구제국의 경제개혁 정책은 크게 세가지의 모델로 대별할 수 있다.<sup>16)</sup> 첫째는 침체된 경제에 활기를 주고 누적된 무역적자를 덜어 보려는 목적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헝가리모델이고, 둘째는 체제의 개혁보다는 노동력의 낭비, 기술발전의 지연, 비합리적인 자본활용과 원자재 및 에너지의 낭비 등 비능률적인 경제운영 요소를 제거하려는 구조개선 중심의 동독모델이며, 셋째로는 중공업과 소비재 생산공업인 경공업을 동시에 중점을 두며 소련으로부터 저렴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음으로써 경제를 유지해 오며 소폭의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해 온 체코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먼저 헝가리를 살펴보자. 동구제국중 경제구조와 관리제도의 재검토를 가장

13) 「조선일보」, op. cit.,

14) 이 부분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이 주최한「韓國政治의 現代의 照明」이라는 87 國內學術大會(87. 11. 30~12. 1)에서 발표한 徐丙喆, “동유럽 國家의 變化하는 現實”의 논문에서 거의 의존했음.

15) Ibid. pp. 884-886.

16) Ibid. p. 886.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먼저 과감하게 이행하게 된 나라가 헝가리다. 헝가리는 경제성장의 침체, 무역적자의 누적,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수요 등 특수한 경제성장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이미 68년 중앙집권형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속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또한 각 기업의 구성원이 기업책임자를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업마다 그 구성원에게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서는 「경제개혁」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정책을 채택했다.<sup>17)</sup> 이렇게 볼 때 헝가리의 「시장경제원리도입」과 「기업운영의 일부 자유화」는 동구에서는 가장 진보적이고 앞선 조치였다. 1956년의 그 뼈아픈 「헝가리사태」이후 헝가리 공산당 지도자들은 「정치적 자유화」에 대신해서 「경제의 자유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한 셈이었다.

1968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헝가리형 경제개혁」은 11년이 지난 1979년부터는 2단계로 15명이하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서비스기업에 개인청부제도가 도입되고 트러스트의 대규모 기업체가 해체되면서 25개 거대기업이 2백8개의 기업으로 분할되었으며 많은 국영기업에 노동자자주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sup>18)</sup>

이렇게 추진되어 온 경제개혁은 84년 5월 당내 개혁위원회와 경제계획위원회가 준비해온 보고서를 당중앙위원회가 헝가리 경제개혁정책의 지침으로 채택함으로써 더욱 더 강하게 전개되고 이 지침에 의하면 헝가리 경제개혁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sup>19)</sup> 국민소득을 조화시키는 체제와 기업의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소득증대라는 경제활동의 자극제를 갖게 하고 관리제한을 억제함으로써 기업들이 획득한 이윤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가격형성체제와 영업세 제도를 현대화시킴으로써 소비자와 생산품 가격과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기업의 이윤제한과 수출가격 기준의 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롭고 융통성있는 가격정책을 활용한다. 무역면에서는 수출입 규정을 과감히 조정하여 융통성있는 무역정책을 채택하고 기업간 혹은 분야간 자본유통 가능성을 확대하는 조치로서 은행제도를 현대화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비능률적인 공산주의제도에 융통성있는 자본주의를 일부 대치시키는 것이다.

17) 「東亞日報」, 1988. 1. 9.

18) Ibid.

19) 徐丙喆, op. cit., pp.888-889.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이러한 경제개혁 정책의 실시는 헝가리로 하여금 동구의 어느 나라보다도 일반소비제품이 그래도 풍족하다는 평을 받게 하고 있다. 헝가리의 주요 산품은 섬유류와 농산물 그리고 철강제품 기계류를 들 수 있으며, 그 중 의료기기분야는 세계적 수준이고,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헝가리는 다른 동구국가보다도 역점을 두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포도주와 벌꿀은 서구의 슈퍼마켓에서는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되고 있다.<sup>20)</sup>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미해결로 남아있다. 개혁을 위한 실적위주의 노동력동원의 필요성과 실업자구제 및 완전고용정책간에도 피치못할 대립이 형성되며, 실적에 따른 임금지불과 균등한 소득분배 원칙간에도 모순이 있고 물가와 임금의 자유화조치는 물가수준 안정정책에 위배된다. 최근의 외신은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헝가리의 경우 88년 들어서서 실시한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비롯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물가가 인상되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동독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80년초 “80년대의 경제전략”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자원을 절약하면서 노동생산 실적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호네커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서기장이 10차 전당대회에서 밝힌 이 집중전략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물자 절약을 하면서 현재 보유한 공장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소수의 사업에만 투자를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성취하려는 것이었다.<sup>21)</sup> 즉 노동과 에너지, 물자와 자본을 절약하면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려는 시도였다. 이에 덧붙여 고안해 낸 것이 “기업결합(kombinat)개혁” 모델이다.<sup>22)</sup> 이 모델에 따라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에 동독에서는 132개의 중앙에서 통제하는 기업결합이 조직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기업의 연구와 사업계획,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이 통합되며 실적 높은 대규모 생산단일체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동독정권은 기업결합 개혁을 통하여 규모가 커지는 데서 오는 장점과 일반적인 협력의 가능성 외에도 기술연구 촉진, 효과적인 투자와 생산의 합리화, 납품의 신속성 및 세계시장에 대한 연구와 이에

20) 「東亞日報」 op. cit.,

21) 徐丙喆, op. cit., p. 894.

22) Ibid. p.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순응하는 생산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결합 개혁은 서방 외채를 다소 줄이고 종합 경제성장면에서 여타 동구제국보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의 책임자인 사무총장 권한이 일반적으로 강화되면서 결합내 개별 기업의 지위와 생산을 위한 자극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 내부적 문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체코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 체코의 경제는 원자재 및 에너지 고갈과 농산물 생산저조 등의 어려움에다 대외무역의 악화로 경제상태는 침체되어 있었다. 이 상태는 외적인 요소에 기인하면서도 중앙통제 계획경제 체제의 비능률성에도 그 원인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전문가와 정치인들은 경제발전요소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계획 및 지휘형태를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 초부터 17개 생산연합으로 결합된 전국 150개의 기업에 생산실적과 품질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관리 개선이 시작되었다.<sup>23)</sup> 방법은 시장경제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구의 활용과 소득증가에 의한 자극을 강화함으로써 실적을 향상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자 80년에 들어서서는 공업, 건축업 및 대부분의 서비스업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경제개혁은 과거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계획체제를 완화하는 최소한의 행정적 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 이에다 금융에 의한 경제지휘와 금전적 자극의 중요성이 70년 말 부터 강조되다가 최근에 와서 체계화 되었다. 고정된 임금외에도 실적수당이 공식적으로 설정되었고 기본 봉급은 모든 근로자 수입의 80%이며 나머지 20%는 보너스형식의 실적수당으로 받게 되었다. 한편 농업분야에서도 개혁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중앙통제계획체제를 약간 완화한 정도에 불과하여 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조직형태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체코는 헝가리와 동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개발의 비두리가 코메콘내의 책임분야 등에 묶여 있으며 원자재 수급도 소련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체코의 개혁전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체코는 개혁조치를 채택한 이후에도 별다른 경제성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지휘체제가 수직형의 상하방향으로만 고정되어 있고 중앙통제 계획구조에서 벗

23) Ibid. pp. 895-896.

## 제 5 장 동구공산주의의 전망

어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코의 경제개혁의 성공여부는 체제개혁을 추진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에서 우리는 동구제국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이미 70년대 이전부터 전개해 왔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 힘입어 경제개혁정책을 각기 나름대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공통되는 주요 특징은 경제에 있어 사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련과 공생관계에서 탈피 자유롭게 수익성을 쫓아 합작등 거래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낙후된 기술과 부족한 재원하에서도 헝가리 산업상 「카폴리」의 애기처럼 수출 증대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아직은 일부국가에 해당되지만 정치적 개혁을 가져오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도 초래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헝가리라 할 수 있다. 헝가리는 이미 의회가 「어용」을 벗고 국가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언론은 당의 확일주의를 탈피 비판의 소리를 서슴없이 게재하고 있다.<sup>24)</sup> 헝가리정권은 이미 서구 TV 시청이나 서구의 신문구독을 완전 개방해 놓았으며, 이러한 서구와의 문화적 접촉은 헝가리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마르크스」나 「엔겔스」 같은 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원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문학·역사·문화·관광류의 책들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하는 지도 모른다. 아무튼 우리는 이 헝가리의 변화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보다 가깝고 문화적 동질성을 간직했던 서구와의 접촉과 교류와의 확대에 의해 과거의 시민사회전통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도 소련과의 지난 30여년의 「불가피한 유대」가 여전히 헝가리의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규제하는 역사적 현실에서 헝가리는 결코 앞으로 서구에의 귀속은 있을 수 없고 역시 「공존」이라는 한계성에 얽매어 있음을 감지케 된다.

이 점이 우리가 동구공산주의를 전망하는 데 하나의 지표가 될 지도 모른다.

24) 「東亞日報」 1988. 1. 8